

‘靑 초청’으로 이슈 해결하는 文 대통령의 ‘정치공학’

광주형 일자리·탄력근로 확대 등 관계자 청와대 초청, 논의 후 타결 김정숙 여사의 비혼모 초청도 눈길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사안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중재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요한 사안들과 연관된 인물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을 문 대통령이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및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 행보와 연관이 깊다. 두 사회적 타협은 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 행보 이후 타결된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청와대로 대기업·중견기업인들을 초청했고, 이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논의했다. 당시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은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건의한다”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노사정이 상생 방향을 찾는 지점이 너무 중요하다”며 공감대를 이뤘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화협’을 통해 적정



문재인 대통령과 고 김용균씨 유가족 만남(왼쪽부터 시계방향), 문재인 대통령과 자영업계 인사들의 만남, 청와대를 찾은 아기들,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의 만남. /청와대

임금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일종의 ‘노사 상생모델’이다.

청와대 초청 이후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달 31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현대자동차의 협약으로 첫 타결을 이뤄냈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 현장을 찾아 “현대차는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에 맞서면서 일자리 만들기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해줬다”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사회적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각각 격려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과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오후 4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노동현안을 놓고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대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문제 ▲제주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문제 ▲최저임금·통상임

금 산입범위 동일화 문제 ▲카풀(스마트 앱에 따른 승차 공유 서비스) 문제 ▲주한 미군 한국인 노동자 문제 등 해결을 요청했다.

청와대 초청 일정 이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기존 노사정위원회 대체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노사는 최근 2개월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왔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합의점을 찾자 20일 청와대 참모진과 차담회 때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합의된 내용 자체가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과정을 봐도, 서로 이해관계가 대치될 수 있는 문제들을 서로 타협하면서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지금 논의 중인 ILO 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소중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역대 정부 최초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노동자와 사측으로 구분된 경제주체에서 ‘자영업자’를 새로운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현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 대안인 ‘혁신적 포용국가’ 핵심주체에 ‘자영업자’가 자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고 김용균씨 유가족을 오후 4시30분부터 5시15분까지 45분간 만난 가운데, 면담 후 본관 앞 현관까지 유가족들을 배웅하고 차가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김씨 유가족의 만남은 김씨가 세상을 떠난 지 68일만이다. 김씨는 작년 12월11일 비정규직 신분으로 혼자 근무하다가 컨베이어 벨트 사고를 당했다. 김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사회는 비정규직의 정규화 관련 노동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여론으로 하여금 여론을 남기는 김정숙 여사의 특별한 청와대 초청 행사도 존재했다. 김 여사가 지난 2017년 9월 비혼모 가정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이다. 비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 기르는 여성들을 뜻한다. 청와대는 지난 2017년 12월31일 김정숙 여사와 비혼모자 가정들의 간담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승훈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세계 첫 국회 내 ‘수소차 충전소’ 왜? “수소경제 활성화 위한 상징적 랜드마크”

인·허가, 안전성 검사 거쳐 7월 완공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4곳에 설치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사업으로 발표한 세계 첫 국회 ‘수소전기차 충전소’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왜 국회에 충전소를 설치할까.

20일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국장은 “국회 수소차 충전소 설치의 가장 큰 이유는 편의성 때문이었지만, 상징적 랜드마크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국장은 국회 충전소 마련 이유로 ▲편의성 ▲안전보장 ▲수소경제 활성화의 지표명 등을 꼽았다.

앞서 정부는 ▲여의도 국회 ▲현대 계동사옥 ▲중랑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계획했다.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의 각 동쪽·서쪽, 서울시 중심에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중랑 물재생센터의 경우 서울시청이 주택보급과 여러 계획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수포

로 돌아갔다. 강북 동쪽을 뺀 나머지 4곳에 충전소를 세운다.

이번 국회 충전소의 경우 의원회관과 국회경비대 건물 사이에 세워진다. 국회 내 부지 992㎡를 활용해 승용차 기준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다. 현대자동차가 구축하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2년간 운영한 후 중·장기 운영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 산업융합촉진법상 운영은 2년 연장 가능하다. 최대 4년의 운영기간을 거치는 것이다.

황 국장은 “수소충전소가 안전성 측면에 있어 문제가 많다는 오해가 있지만, 국회에 설치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한 것”이라고 전했다.

황 국장은 그러면서 “국회 충전소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야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35명으로 구성된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같은 해

12월부터 국회 사무처에 국회 내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국장은 “여야가 합심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끌고 간다는 의미와 함께 (기업을 겨냥해) 지원을 강화하라는 메시지가 담겼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수행차로 수소차를 끌고 다니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국도교통부는 올해 6월까지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 상업·주거지역은 가스공급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공익사업 외 목적의 국공유지 임대지 제한 등으로 도심 내 충전소 설치 불가했다.

다만 국회 충전소의 경우 부지 임대비용 부담 여부 등이 아직 현안으로 남아있다. 부지 임대비용 부담을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와) 자세한 협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유영민 장관, 5G 원격 드론관제 시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과천시 KT사옥에서 열린 ‘5G 관련 기술 현장방문 및 5G 콘텐트 기업간담회’에서 5G 기반 원격 드론관제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수부, 서해5도 어장 면적·조업시간 확대

앞으로 서해 5도 어장에 여의도 면적 84배의 공간이 확보되고 조업시간도 1시간 연장된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영·B·C 어장(368㎢), 연평어장(815㎢), A어장(61㎢), B어장(232㎢), C어장(138㎢) 등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9㎢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 확장 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이며,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만평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에 확장된 총규모 2459㎢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입영·동원훈련 통지서 카톡으로 받으세요”

병무청, 5년간 우편요금 12억 절감

‘카톡! 카톡! 동원훈련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앞으로 병무관련 통지서들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전달된다.

병무청은 20일 “최적의 병역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젊은 세대의 시각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모바일 앱(이하 앱)을 구축해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서비스는 기존의 우편과 이메일로만 받아보던 현역 병입영·동원훈련 통지서 등을 병무청 앱과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앱과 모바일 통지서 발송으로 각종 통지서 수신 선택 폭이 확대되고, 5년간 12억 원의 등기우편 발송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경우 ▲입영·동원훈련 일정의 개인별 자동알림 ▲통지서 화면에서 연기신청 ▲훈련장소의 날씨, 숙박·식당 정보 등 입영 및 동원훈련과 관련된 다양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앱은 육·해·공군·해병대 모집 분야 중 본인이 원하는 복무 분야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병역이행 캘린더’가 있어, 지원 시기를 확인 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 본인 확인으로도 민원인의 정보보호와 민원제출이 가능해졌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산업부, 호주·뉴질랜드서 2억弗 투자유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한 결과 2억달러(약 2250억원)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시드니에서 호주의 재무·인프라 투자, 회계, 바이오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양국 투자협력 확대 필요성과 투자협력 가능 분야, 한국의 투자매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뉴질랜드와 호주의 식품, 소프

트웨어, 콘텐츠, 인프라 기업들과 개별 협의를 진행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설명하고 투자 애로를 점검했다.

산업부는 행사를 통해 고급소비재와 레저산업 분야에서 투자자들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투자신고서를 받았다.

또 에너지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연내 투자신고가 이뤄질 예정인 1억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사업을 발굴했다.

/세종·최신용 기자